

영·호남 학생 ‘우정의 타임캡슐’ 열린다

전남·경남 교육청, 20년만에 오는 17일 동시 개봉
당시 약속카드 낭독, 성장 과정 다큐 상영 등 다채

영·호남지역 학생들이 2천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우정을 담아 묻은 타임캡슐이 20년 만에 개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영·호남 학생 ‘꿈과 우정의 타임캡슐’ 개봉행사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도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한다.

같은 시각 경남도교육청도 의령 소재 학생교육원에서 타임캡슐을 연다.

이날 전남교육청 개봉행사에는 타임캡슐에 ‘꿈과 우정의 약속’ 카드를 봉인했던 주인공 50여명(전남 44명, 경남 1명과 가족 등)이 성인이 된 모습으로 참석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세월의 흐름을 직접 보여준다.

또한,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현 전남교육청 관계자와 경남도교육청 김상권 학교정책국장과 장학사, 타임캡슐 봉인행사를 추진했을 당시의 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한다.

참석자들은 전남교육연수원 앞마당에서 타임캡슐을 발굴한 뒤 200강당으로 옮겨 개봉식을 가진다. 개봉식은 식전공연과 경과보고, 교육감 인사말, 내빈 축사, 개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봉식에서는 당시 전남과 경남

의 약속카드 주인공 두 명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약속카드를 낭독하고, 또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가 마련돼 있다.

타임캡슐 주인공 중 한 명의 20년 동안 성장과정을 담은 영상물도 상영될 예정이다어서 관심을 끈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지난 1999년 5월26일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나누고, 새천년 주역이 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타임캡슐을 봉인해 전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당시 경남덕유교육원 의령본원) 앞마당에 각각 묻었다.

이 캡슐에는 당시 전남과 경남의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1천72명(전남 559명, 경남 513명)의 꿈과 희망이 담긴 약속카드가 봉인돼 있다. 이들은 카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자기소개, 장래희망, 20년 후의 나의 모습, 경남(전남) 친구에게 바라는 글 등을 B5 크기 용지에 작성한 뒤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로 코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개봉한 타임캡슐과 약속카드를 전남과학교육원에 임시 보관한 뒤 전남교육박물관(가칭, 설립 예정)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표지석은 원래의 자리인 전남교육연수원에 보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T/F를 꾸린 뒤 타임캡슐 개봉을 준비해왔으며, 공개적으로 당시 약속카드를 작성했던 주인공 찾기에 나선 결과 300여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들은 30대 초반의 성인이 돼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기자

교원 87.4% ‘사기 떨어져’...역대 최고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38회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5천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지난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새 32%p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1년 79.5%, 2015년 75.0% 등의 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역

대 최고치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5.6%로 나타났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55.5%)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48.8%), ‘교육계를 매도·불신하는 여론·시선’(36.4%),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32.0%), ‘툭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14.6%), ‘권위적

학교문화, 동료 교직원 간 갈등’(9.7%)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교원 명퇴 증가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재차 입증됐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학생 생활지도 불고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였다.

그 다음은 ‘교원의 본분에 맞지 않는 과중한 잡무’(14.6%), ‘교직사회를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11.5%),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피로감’(9.8%) 순이었다. 실제로 올해 2월

학부모 민원·학생 생활지도 고충 ‘교권 잘 보호받지 못한다’ 65.6%

말 명퇴 교사 수는 6천19명으로 지난해 2월~8월 명퇴자를 합한 6천143명에 근접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들의 사기와 교권이 ‘저하’를 넘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고, 명퇴의 주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 등을 통한 실질적 교권 확립과 교원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기자

청소년·업주에 흥기 휘두른 50대 남성들 잇따라 검거

청소년과 업주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 남성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청소년들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만취한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에 광주 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흥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다”고 주장하며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도망가는 학생들에게 돌을 던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흥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다, 경찰관이 흥기를 든 손을 발로 차면서 검거됐다.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는 이모(57)씨가 업주를 흥기로 위협하다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술집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주방에서 흥기를 들고 협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이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환준기자

음주 추돌사고 도주자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음주 추돌사고를 낸 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44·여)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차한 3대의 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했다.

또 A씨는 오후 5시50분께 서구 치평동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다른 차 밑으로 들어가 숨어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결국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차를 들어 올린 후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 숨고 싶었다. 막걸리 두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철현기자



친일잔재 청산, 새로운 교과서 제작

13일 오전 광주광역시·고등학교 비전홀에서 열린 개교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친일 작곡가가 만든 기존 교과서 대신 새로운 교과를 처음으로 제창하고 있다. 광덕중·교고는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과를 교체해 광주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첫 성과를 보였다. /김메리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출점 논란 가중

‘상인 동의서 위조’ 의혹 제기…“동구, 행정절차 멈춰야”

이마트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초입에 출점을 추진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허위 서류에 기반을 둔 사업 진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노브랜드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브랜드 입점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동구는 유통발전협의 회 개최를 취소하고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등은 “남광주시장 인근 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이 동구에 제출한 동의서에 입점 반대 의사를 표명한 6명이 기권으로 표시돼 있다”며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데도 누군가 대신 서명해 놓은 명부에 상인 62%가 노브랜드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했다.

노브랜드 입점 논란은 지난 3월29일 이마트가 동구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매장 개설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마트는 남광주시장 내 3층 건물의 2층에 총 436.7㎡(판매시설 면적 252.6㎡) 규모로 입점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 노브랜드 매장 예정지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km 안쪽에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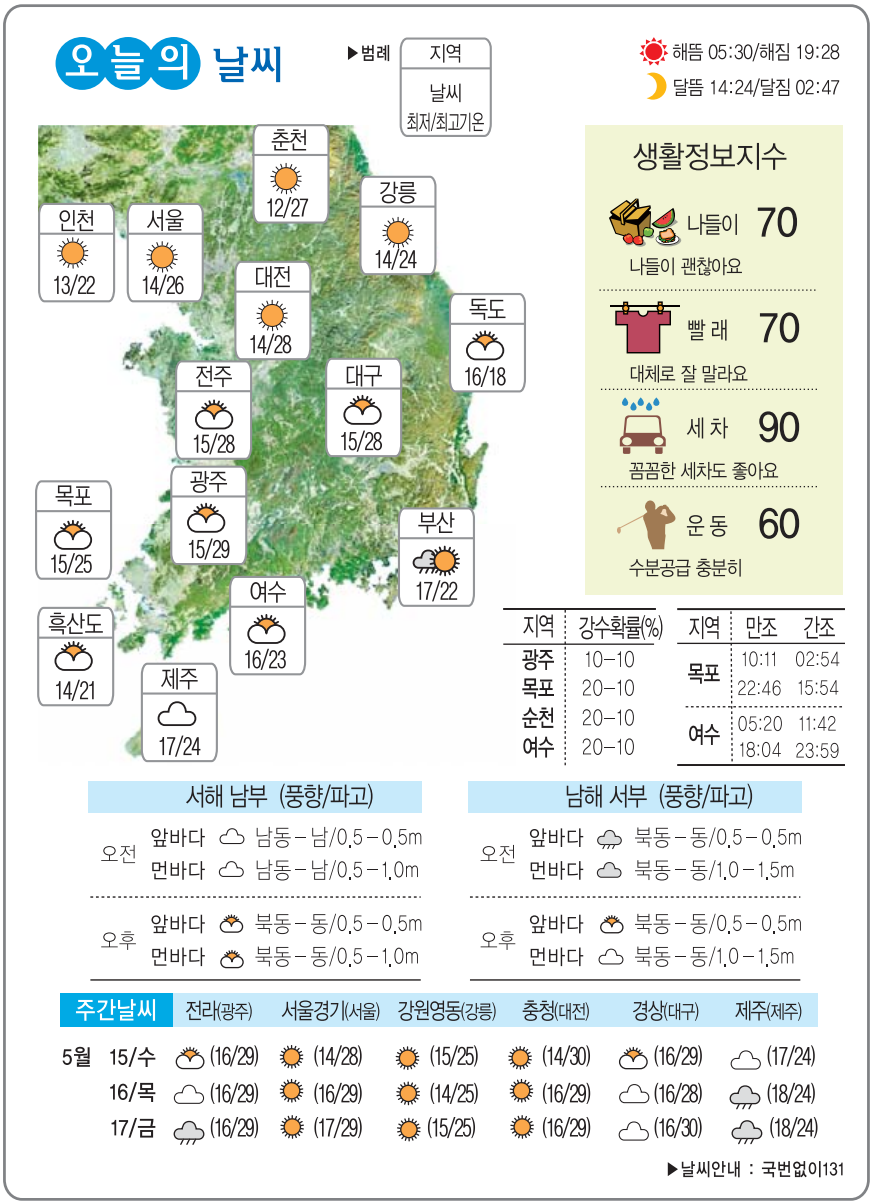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마트가 동구에 제출한 서류에는 남광주시장과 해뜨는시장 상인회 집행부가 회원 상인 과반의 찬성을 받은 서명부가 포함되어 있다. /오승지기자

비대위는 “동구가 위조된 동의서를 토대로 유통상발전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검찰은 사문서위조 논란으로 변질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한다.

비대위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골목상권을 노리고 준비한 변종SSM(기업형슈퍼마켓)이라며 시장상인 생존권을 지키고자 출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14일 예정인 유통상발전위원회 전까지 상인들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제반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

광주김치, 한국국제요리경연 대통령상

11년 연속 참가 20여회 수상

광주·전남김치생산업체와 김치연구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김치팀이 '2019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3일 한국음식관광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트레칸, 자연락김치, 산들래(여) 등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공동 주관한 한국음식관광박람회 기간 중 개최된 제20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전통음식전시 부문에 참가해 광주김치, 내림김치, 북한김치 등 100여종의 한국김치를 전시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전남김치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김치팀은 대통령상, 식품·조리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김치 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한다.

비대위는 “동구가 위조된 동의서를 토대로 유통상발전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검찰은 사문서위조 논란으로 변질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한다.

비대위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골목상권을 노리고 준비한 변종SSM(기업형슈퍼마켓)이라며 시장상인 생존권을 지키고자 출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14일 예정인 유통상발전위원회 전까지 상인들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제반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했다.

또한 전통 발효음식의 본고장 전라도의 대표음식인 광주김치와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의 김치를 연구한 내림김치, 북한김치 등은 박람회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을 물론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음식관광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광주김치를 전시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총 20여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는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음식관광박람회는 한국 음식의 관광 자원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음식박람회로 2천여명의 조리사가 10개 부문 50여개 분야에서 열린 경쟁을 펼쳤다. /정겨울기자

광주교육청, 제1기 시민참여단 공개 모집

오는 20, 27일 두차례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공개 모집에 나선다.

시민참여단은 교육청지에 관심있는 시민 6명, 시민(직능)단체 추천자 20명 이내, 시의원 1~2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부터 6월11일이다.

모집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시인 만19세 이상으로 최소 월1회 이상 회의 참석이 가능한 자이며, 시교육청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해 광주교육에 관심

을 갖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육정책 참여의 외연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민참여자 발굴을 위해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광주시교육연수원 및 2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 홍보 및 교육자치에서의 시민의 역할 등에 대해 특강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참여담당관 안석 과장은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교육자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남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강화

광주 남구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강화에 나섰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할 것과 범죄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납득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리현장 표준안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최근 납세자 권리현장을 전면 개정, 지난달 22일 이를 고시한 뒤 권리보호에 나서고 있다.

세르게 바빈 납세자 권리현장의 주된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

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또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와 조사연장 및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하는 추세”라며 “납세자 보호관 운영 및 권리현장도 개정한 만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철현기자